

박근혜 탄핵 가결... 현재의 탄핵심판 결정 얼마나 걸리나?

형사소송 준용시 수사기록 받아보는 시점이 큰 영향 줄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이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헌재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소송 준용시 적용되는 전문법칙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을 받아보는 시점 등이 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탄핵사건 전원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될 박한철 헌재소장이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것도 심판 속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 준용시 '전문법칙' 어떻게 하나 현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기 때

탄핵사건 심리 6개월 이상 가능 등 '전문법칙'에 긴 시간 소요될 수도

박한철 헌재소장 내년 1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것도 심판 속도에 영향

문에 박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는 6개월 이상 늘어질 수 있다.

검찰에서 작성한 피고인이나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과 참고인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데 이런 것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장본인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등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전

부 법정에 불러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에서 이 사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1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씨 등은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며 "결국 다들 불러서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할텐데 180일만에 결론을 내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탄핵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을 준용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민사소송 준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재 인법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다른 인사는 "헌재재판관이나 연구관들 사이에서도 민사소송 준용이 과연 가능한지를 놓고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탄핵사건에서 민사소송을 준용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다. 결국 헌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검찰 수사기록 전달 시점 및 헌재소장 임기도 영향

현재가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얼마나 빨리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심판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지 얼마 되지 않아 재판기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는 조만간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록을 넘겨

주지 않을 경우 현재의 법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만큼의 시간이 또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을 법무부를 통해 받은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그때는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던 당사자였으니 검찰기록을 받아보는 게 가능했지만 이번에도 그때처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출신인 박 소장의 임기가 1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록을 박 소장이 있을 때 받으려고 할 텐데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다보니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히 안 되면 기다렸다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헌재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소장 임기가 끝나면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박 소장 후임 역할을 하게 될지 말지를 놓고 재판관들이 따로 회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심판 절차를 순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마지막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지난 9일 오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3분부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됐다.

정치권,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 '탄력'

정치권에서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정국 수습책으로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은 국정위기 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이제 빨리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루 빨리 임시국회부터 소집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최소한 세 분야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경제, 외교 안보, 또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밝혀진 적폐들을 해소하는 세 가지 협의체를 주축이라도 빨리 신속히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탄핵안 가결 직후 "국정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간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국회의 협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박근혜 탄핵 가결 도내 정치권 "촛불이 이겼다"

- 민주당 도당 -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 될 것"
- 국민의당 도당 - "대통령 탄핵, 국민혁명의 새로운 시작"
- 송하진 도지사 -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민심의 승리"
- 김승수 전주시장 - "더 큰 민주주의 실현하는데 온 힘 다할 것"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전북 정치권 등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 가결 결정은 민주주의 수호와 정치 발전을 위한 전진 계기를 이룬 것이다"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촛불은 항상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이기는 역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행동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기와 선택에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내며 머리 깊게 숙여 존경의 예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가결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정권에서 국민과 국가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 탄핵 사태에 종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제1야당으로서 몸을 낮추며 국민의 안녕과 민생보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신속하고 바르게 판단해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역시 "오늘은 국민들이 주권자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다"며 "촛불의 힘을 보여준 전북도민의 힘이자 국민들의 힘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민혁명의 새로운 시작이다"며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통령 탄핵 가결은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이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압도적인 촛불 민심의 승리이며, 뜨겁고 정의로운 성숙한 시민의식의 승리"라며 "그 동안 시민행정의 위대한 대열에서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탄핵 가결 환영 논평을 내고 "2016년 12월 9일은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며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생업도 미뤄두고 아픈 몸도 마다 않고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탄핵을 목 놓아 외쳐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오늘의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오늘은 국민들의 날이자 시민들의 날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뉴시스



지난 9일 오후 전주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현장을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 도민들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발표된 지난 9일 오후 4시 10분께 전북 전주역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침묵을 지키며 국회의 투표결과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이 가결되자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를 되찾았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성모(41)씨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우리 국민의 승리고, 역사의 승리다"며 "오늘 탄핵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역사 앞에 고개를 떨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인들도 시민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기쁨을 표했다.

전주시 효자동 한 분식집에서는 '오늘 하루 떡볶이 공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무료로 떡볶이를 제공했고 중앙동 한 커피숍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단돈 500원에 판매했다.

상인 김모(28)씨는 "오늘은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다.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국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다"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민들에게 건넸다.

시민·사회단체도 논평과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무너진 헌정질서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국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탄핵소추 가결은 대통령 즉각 퇴진의 또 다른 이유며, 촛불 항쟁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과 공범들, 부역자들의 끝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촛불을 들고 거리와 광장에 나선 국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와 부역자들이 구속되고 청산될 수 있도록 절대로 촛불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오늘(9일)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린 심판이며,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탄핵 가결은 부패하고 낡은 권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표도 '여야정협의체' 구성 제안 새로운 국가 위해 우선 청산해야할 6개 과제 제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논의를 주문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문 전 대표도 이 대열에 가세했다. 탄핵안 가결 후 국정공백 상황에서 상향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의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라며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권한행사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진다"며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하야선언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부도,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촛불민심시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기엔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해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로 ▲비리·부패 관련된 공범자의 부정한 재산 몰수와 지위 박탈 ▲특혜시대 산물인 정경유착 엄중 처벌 ▲국정농단 비호한 권력기관 공범 색출과 책임자 문책 ▲언론장악·억압한 책임자 조사·처벌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 등을 제시했다. /뉴시스